민주주의와 과거청산

한상범

한상범 | 1936년 경기도 개성 출생 ● 1958년 동국대 법대 졸업 ● 1960년~61년 조선대 교수 ● 1961년~2002년 동국대 교수 ● 1995년~99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현재 명예회장) ● 1991년~현재 아세아 태평양 공법학회 회장 ● 1990년~94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1990~현재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1996년~99년 한국기독교인권센터 실행이사(학계-불교계 대표) ● 1995년~현재 참여연대 고문 ● 1999년~현재 인권정보센터 회장 ● 2000년~현재 민족정기회복운동 시민단체연대 상임의장 ● 2000년~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사 ● 2001년~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 저서 : 『시민사상과 민중의 복권』,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일제잔재청산의 법이론』, 『박정희 역사법정에 세우다』, 에세이집 『종이로 만든 마을』 외 다수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침략 전쟁에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이 땅에선 민주주의가 이념이나 제도로 공인됐다. 물론 한국에서도 민권의 자각과 민주에의 지향은 일찍부터 싹 트고 있었다. 최초의 전제군주시대에 민권에 대한 의식은 유교의 '민본주의' 에서 비롯됐다. 재일교포 사학자 강재언은 『조선의 개화사상』이라는 책에서 율곡이 군주에게 지도자론을 강의한 『성학집요聖學輯要』의 한 구절,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습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습니다' 라는 말을 상기시키며 이 유교적 발상의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뒤 민중을 존중하는 기풍은 실학을 통해 개화사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른바 한국판 시민사상이랄까?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1919년 3·1운동의 목표가 군주제 복고가 아니라 민주공화제 창건에 있었다는 점도 획기적이다. 아니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혁명적' 이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놓고 민주주의를 말하게 된 것은 1945년 이후이고, 그 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도 좌파와 우파가 다르고 남과 북이 달랐다. 이 민주주의가 남과 북으로 본격적으로 각기 다르게 제도화되는 것은 1948년 남과 북이 분단국가로 체제를 갖추게 된 시기이다.

기호투표제와 한국 민주주의

중도파의 불참과 좌익의 무장투쟁을 무릅쓰고 강행된 1948년 5·10총선거는 어쨌든 대중이 대거 참여했던 최초의 투표였다. 당시의 투표 방법은 '기재투표' 가 아니라 지금도 답습되고 있는 '기호투표' 이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이 아니라, 기호로 표시된 후보 이름 밑에 도장을 찍어 표시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작대기 하나를 그어놓는 식으로 표시해서 후보마다 '나는 작대기 둘, 아무개 올시다' 하고 연설했다.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투표자를 위한 제도였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붓 뚜껑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숫자인 1번은 유리하고, 네 번째 숫자인 4는 왠지 께름칙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불리하다는 미신(?)같은 망령을 떨치지 못한다. 더구나 이승만 이래의 독재자들은 어느 후보 쪽에 찍었느냐는 시비를 걸어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거나, 투표 용지에 도장을 하나 더 찍어서 무효표로 만드는 피아노표를 만들거나, 필적 감정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몰표나 무더기표를 만드는 식으로 갖가지 부정투표 방법을 개발해 애용했다.

해방 직후 투표권자도 아니었던 나까지 어른들의 민주주의 놀이(?)를 구경하면서 지도자를 뽑는 절차와 방법으로 기호투표는 좀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나는 민주주의가 우민주의의 바보놀이 정치로 타락하는 것을 혐오해 철학자 같은 엘리트의 지배를 이상으로 꿈꿨던 귀족 청년 플라톤의 공화국론을 읽으면서, 민주주의가 나치 같은 독재자들에게 악용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봤다. 일찍이 에리히 프롬이 지적한 것처럼, 자유 선택에 따르는 책무를 기피했던 나치 지배 아래의 중간층이나 소시민층의 비겁한 심리 구조는 남의 일만이 아니었듯 싶다.

왜 민주주의인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애국자라고 하면 김구 선생을 떠올리지, 이승만을 애국자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다. 해방 후 미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이승만을 한국인에게 소개했다. 어린 눈에 봐도, 푸른 눈의 양부인을 대동한 이승만은 우리말도 더듬거렸고 서민보다는 기름진 사람만이 따랐는데, 그들의 이해를 대변해 친일파 문제를 덮어두자는 그의 논법도 지극히 의심스러웠다. 더구나 이승만을 이씨 왕조 양녕대군의 후손이니 국부 國父 니 추켜세우는 것도 이상했다. 이씨 왕조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하자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어떻게 이승만이라는 개인이 '국부=나라님' 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민주주의 자체와 이승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결국 이

승만이나 그의 추종 세력인 친일파는 안 된다고 진지하게 결심하게 된 것은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을 겪은 뒤였다.

내가 1950년대 후반에 민주주의는 '노No'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한 노머 커신의 논설(「민주주의의 가치」, 『동국법정』, 제1호, 1957년)과 소로우의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시민의 불복종권」, 『동국법정』, 제2호, 1958년)을 번역해 소개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친일이나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과제를 40여 년 동안 연구해 왔다.

흔히 나와 인터뷰를 하는 기자나 학생은 '인권문제에 자기 학문의 모든 것을 경주해 왔다고 하면서 당신은 왜 '일제잔재' 란 문제에 매달려 왔느냐?' 고 묻는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선 더욱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답은 이렇다. 인권은 민주주의가 잘 되어야 보장될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일제잔재 청산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제잔재보다 구독재시대 잔재 청산,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과거청산' 없이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주의가 안 되면 인권도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인권문제는 결국 특정 정치권력과 사회세력이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당신이 이승만이나 친일파 문제를 그토록 집요하게 따지게 된 문제의식을 갖게 된 동기나 이유는 또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되돌아오곤 한다. 이에 대해선 좀더 구체적으로 내 체험담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많으면 빨갱이' 로 몰리는 세태, 이승만 시대의 매카시즘

이승만은 1950년 6·25전쟁이 났을 때, 서울을 '사수' 하겠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녹음 테이프를 남기고 도망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해 많은 시민을 희생시켰다. 게다가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을 공산 치하에서 부역했다고 몰아세우며, 긴급명령 1호라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날조된 명령

(1950년 6월 25일, 국무회의 의결로 위조)으로 단심 재판에서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 금고에 처하는 중형에 처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부산 피난지에서는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공산당 준동의 구실로 계엄을 선포하고 '땃벌떼' 와 '백골단' 이란 테러리스트를 동원해 의원과 국민을 협박·폭행하면서 이른바 '발췌 개헌' 이라는 연극을 꾸몄다. 누가 봐도 이승만의 이런 폭거는 무법이고 불법이며 탈법이었다.

당시에 나는 인천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구제 6년제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전쟁이 나서 학업을 중단했던 나는 이북에서 피난 온 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당시 학생들 중에는 현역 군인, 정보 기관원, 경찰관 등 재학 시절에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옆길로 빠진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에 등록해 있었다. 이런 판국이니 정상적인 학교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 어수선하고 들뜨고 비정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나의 젊은 기분은 살아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승만 정부의 처사에 온갖 불만을 갖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이승만 정부의 처사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비판했다.

"이승만 정부의 헌법개정 강행 처사는 독재다. 민주주의를 지키려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할 말은 하고 보자. '중공 오랑캐' 라고 하지만 중국이 하나의 세력으로 국제 사회에 등장한 것은 사실 아닌가? 미국의 군사력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만능은 아니다. 일본의 월간지 『중앙공론 中央公論』을 보니까, 압록강 수풍댐을 폭격하던 B-29(폭격기)가 공산군의 MIG 제트기에 의해 격추됐다고 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은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겁도 없이 내놓은 이런 발언이 당시 경찰의 '사찰과' (지금의 정보과로 좌익사범 전담부서)에 포착된 모양이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학생 중에 경찰관이 있어서 나의 비판을 좌익 언동으로 신고한 것이다. 그런 문제의

발언을 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 학업이 끝나 집에 돌아가려고 하던 나에게 사십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복형사가 '학생이 한 아무개인가?' 라고 하면서 잠깐 물어볼 일이 있으니, 경찰서까지 함께 가자고 했다. 피난학교와 경찰서와의 거리는 고개 하나 사이로 7분이나 10분 정도의 거리였다. 순간적으로 예감이 좋지 않아서 도망갈까 생각하고 형사들을 살펴봤다. 나의 수상한 거동을 눈치챈 두 사람의 형사는 '쓸데없이 굴지말고, 잠깐 가자' 며 양옆에서 내 앞을 가로막았다. 전쟁발발 전까지 학교에서 유도를 배워 선수 후보로까지 뽑힌 적이 있던 나는 한 사람 정도는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으나,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도망치면 결국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격이니 일단 부닥쳐 보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자 형사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일상 남의 일로만 들어오던 '말이 많은 놈은 빨갱이' 란 말이 나에게 그대로 들러 씌워지는 것이었다.

"네가 뭔데 대통령을 욕해. 국부님, 나라님을 욕해. 이 자식 빨갱이구먼"

그는 윽박지르고 뺨을 때리면서 겁을 주고 얼을 뺐다. 그런 뒤에 백지 몇 장을 주고 '자술서' 를 쓰라고 했다. 무엇을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고 그저 '네가 한 일을 사실대로 적으라' 고 했다. 지금 자술서의 성격을 보면 결국 서면상의 자백이다. 이 자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지만, 어떤 것을 자백하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 논리대로 하면 나의 언동을 모두 써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부산정치 파동을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됐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대로 테러단을 동원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비난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반대하는 자들은 빨갱이들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왜 국부를 비방하냐' 고 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법에 백골단이 날뛰어도 괜찮은지 모르겠고, 누가 어떻게 빨갱이인지도 신문에서 못 봤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진짜 아까(일본말로 빨갱이) 아니야?' 했다.

저녁 늦게 심문은 끝났으나 겁도 나고, 지쳐서 초조하고 목도 마르고 집에 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중국 공산정권을 옹호한 것과 미군 B-29 비행기 격추를 유언비어로 퍼뜨린 것을 자술서에 다시 쓰라고 했다. 잘못하면 진짜 빨갱이로 몰려서 곤욕을 치를 것이 겁이 났던 나는 1949년 중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뿐, 그것을 찬양할 의도는 없었다고 버텼다. 그리고 B-29 미군기가 격추된 사실은 일본 잡지에 난 그대로 말했다고 하니까, 먼저 '네가 일본어를 읽을 수 있냐?' 고 따지고 들었다.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일본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니 선뜻 납득이 안 되는지 일본 책을 읽어보게도 했다. 그 다음에는 나더러 그 좌경용공 잡지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고 심문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될 것 같아 나는 끝끝내 부두 쓰레기통에서 습득했다고 우겼다. 간신히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다시 자술서를 정리하고 조서를 꾸민 뒤, 일단 훈방으로 간신히 풀려났다.

그러나 여전히 꼬리가 달렸다. 그들이 미리 정한 날짜에 경찰에 출두하라고 했다. 그러나 가지 않기로 했다.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지금 나 같은 쫄때기 사건에 매달릴 겨를이 없고, 일단 훈방했으면 출두할 의무는 없으니 안 가고 그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다시 봤다. 내가 문제인물로 지목되어서 경찰서 사찰계에 연행됐던 '혐의자' 라고 소문이 나자 친족이나 친우나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하거나, 내가 접근하면 겁을 내고 피했다. 빨갱이와 관계 있다고 해서 벼락 맞을까봐 그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야속하고 불쾌했지만, 그들도 피해자의 하나라고 생각하니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관대하게 대하기로 했다. 물론 그렇게 마음먹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번뇌하고 괴로운 날을 보내야 했지만.

그 뒤 나는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탄압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됐다. '말이 많으면 빨갱이다' 라는 유치하지만 무서운 논리의 반민주성, 이승만 정부의 요직에 도사린 친일파의 문제를. 나중에 공부를 해가면서 알게 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만, 그들이 빨갱이를 일본말로 '아까' 라고 지칭하면서 탄압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 제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게다가 일제 지배 아래에서 경찰, 헌병, 헌병보조원, 밀정 등을 하던 자들이 애국자로 둔갑해 주요 공직에서 날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과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반공' 이란 도깨비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며 비판을 봉쇄하고 반대파를 때려잡는다. 바로 이것이 친일파 세상이 아니고 뭔가? 특히 1950년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탄압의 실태를 목격한 뒤로는 우선 일제잔재를 청산해서 민주주의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권이란 허울뿐인 구호이고 법의 공허한 장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권력의 위협 앞에 떠는 초라한 자화상

내가 대학강단에 서게 된 것은 4·19혁명 덕택이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일은 나에게 참으로 살아가는 보람이랄까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지방대학의 이사장이란 실권

자도 여전히 이승만 잔당의 일원이었는지라, 대학신문에 「학문의 자유」라는 논설을 썼다는 이유로 여기에서도 미움을 받아 대학을 떠나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다가 1960년 5·16쿠데타가 발발했다. 이승만 잔당인 이사장은 장면 정권의 몰락을 춤을 추며 기뻐했다. 나의 처지는 곤란하게 되어 서울로 와서 강사 자리를 찾았다. 그 뒤 1964년에 전임교원이 됐으나, 박정희 정권의 한·일 국교 추진이 '굴욕외교' 라는 반민족적 폭거임이 밝혀져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됐다. 교수단의 반대궐기대회 참여와 반대서명은 군사정권을 반대한다는 의미였으므로 나는 언제 대학에서 쫓겨날지 불안했다. 내가 재직하던 학교에선 이미 양주동 선생이 추방됐다. 내가 학교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눈에 띌 만큼 비중 있는 교수가 못 됐기 때문이었듯 싶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문교부(교육부)가 관계하는 연구비나 해외파견 등의 혜택에선 일체 배제됐다.

그 뒤 1969년 3선 개헌을 반대하고(「3선 개헌 조항 해석」, 『신동아』, 1969년 11월호), 1972년 유신을 거부한다고 해서 곤욕을 치렀다. 당시 법무장관이었고 훗날 중정부장이 된 ㅅ아무개에게 서울대 김철수 교수 등 몇 사람이 수모를 당했다. 이런 일은 박정희 피살 뒤 신군부 정권의 집권 시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1980년 5·17쿠데타 직후 지식인 검거 선풍이 한창 불던 7월 22일, 나도 계엄사 합수부에 의해 검거되어 학생시위 선동 배후조정 등 몇 가지 혐의로 조서를 썼다. 그들의 절차대로라면 사표를 내고 석방되거나, 군사재판을 받고 파면되어야 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일이 변변치 못했던지 석방이 된 뒤 학교에서 총장의 징계조치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사실 그 당시에는 사표를 내고 강단을 떠나는 것이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파면을 당하는 것이나 겁이 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족의 비참한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 위축이 됐던 것이다. 저항의 기개도 없고, 혁명가의 흉내도 낼 수 없는 졸장부란 것을 나는 이때 스스로 알게 됐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도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았다. 한 번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라는 직책 때문에 진관의 사건과 관련해서였다. 다른 한 사건은 천도교 교령 오익제의 입북사건 연루 혐의였다. 오익제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공동대표로 있었는데 나도 불교계 대표로서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익제와의 관련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훗날 안 일이지만 1998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김대중 죽이기 공작의 일환이었다. 이런 사건날조 공작은 김대중 측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호지부지됐다.

나는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그간의 일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목숨을 바친 청년학생들을 비롯해 순교한 열사와 투사들을 생각하면 살아남은 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다. 강단에서 청년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말해 오면서 살아온 자로서 더욱 그렇다.

과거청산과 의문사 문제에 부닥쳐서

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일을 하게 되면서 해방 후 반 백년이 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기득권층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열한 행적을 일부나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나는 교수생활을 하기 전인 50년대 중반부터 인권을 위해선 민주화가 되어야 하고, 일제잔재 청산 없이는 민주화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 왔다. 헌법과 법철학, 법사회학을 연구한 것도 지적 호기심이나 모험심만이 아니라, 확실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 그런 연고인지 〈민족문제연구소〉에도 관련을 하게 됐다. 이런 관계 이외에 1965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확산될 당시 내가 재직하던 학교의 학생이 시위 도중 경찰 방망이에 맞아서 사망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경찰병력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생겨난 사망사

고이니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채 분노를 삭이고 있었다. 당시 동국대 교수회는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결국 사망 경위를 조사하자는 결의까지 힘겹게 해냈다. 여기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를 포함해 조사위원이 선정됐는데, 이때 내가 젊은 교수로서 총무간사의 심부름을 맡게 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나 경찰은 우리 조사단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회의조차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은밀하게 해야 했고, 온갖 불편을 무릅쓴 채 증인을 접견하고 현장검증까지 해 결국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타살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개인적 체험도 있고 해서, 권력의 탄압으로 사망한 사고사의 진상규명은 단순한 증거수집과 현장검증 작업이라기보다는 권력 실체와의 대결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온갖 압력과 협박, 회유와 유혹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됐다.

그래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불안과 겁이 나를 가로막았다. 더구나 똑똑하고 적절한 적임자로 생각되던 사람들이 대개 사양하는 눈치여서 내가 나설 자리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일이 아닌가? 군사정권의 주역이나 그 추종자들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나 그 아류들, 그리고 그들에 빌붙어 출세하려는 부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자 나는 전화로 의사타진을 하는 분께 수락의사를 표명하고, 일본에서 예정된 학술발표회의 일로 여행을 떠났다. 일주일도 안 되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미 신문에 예정자 지명이 보도된 뒤였다.

나는 군사정권 30여 년의 세월에 저질러진 정치적 탄압으로 사망한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반세기 우리 정치의 추악상을 보는 엄청난 인생학습을 하게 됐다. 원래 정치권력의 문제가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되고 갈등을 빚는 현실의 적나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그

러나 생각보다 비열하고 악독하고 파렴치한 민족반역과 민주배반의 행태에 대해선 다시금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사람을 죽여 놓고서 그 진상이 분명하게 밝혀져도 아니라고 우겨대는 몰염치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야심과 이득을 위해서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의 뻔뻔스러움이나 그를 옹호하고 그 그늘에 빌붙어 계속 영화를 누려온 죄악을 사과·사죄할 줄 모르는 양심 부재의 인간군상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여기서 나는 민주주의나 인권의 역사가 피로 얼룩진 발자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영국이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왕권신수설의 귀신을 떨쳐버리는 데에는 왕을 인민의 반역자로 처단한 청교도혁명과, 왕을 국외로 추방한 명예혁명이 필요했다. 1789년의 인권선언을 낳은 프랑스혁명도 왕의 권위를 극복하고 공화국의 정신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루이 16세 부부를 단두대로 보내야 했다. 한편 구세력의 잔재와 잔당을 그대로 온존시킨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됐고, 그 뒤 나치의 등장으로 피범벅이 되는 비극을 치러야 했다. 러시아 제국을 변화시키려던 시민혁명의 좌절은 스탈린의 폭정으로 이어졌고, 사회주의와 칼 맑스를 최대한으로 모욕하는 역사의 역설을 가져왔다. 왕을 신으로 모시고 근대화를 군사국가화로 몰고 나아간 일본제국은 신의 제국이라는 미명 아래 제 나라 백성 수백만 명과 아시아 민중 수천만을 떼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역사에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채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통용될 수 없다. 나는 이 점을 역사에서 배우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과거청산이란 과제와 씨름하면서 배우고 있다. 이처럼 의문사 진상규명이란 민주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과제이자, 그 자체가 반민주세력과 대결하고 투쟁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중대한 사업을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초조감마저 밀려든다. 우리가 모두 달라붙어서 해도 어려운

일인데 말이다. 물론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은 무수한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의 유족을 대할 때마다 '살아남은 자'의 할 일,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상명령 같은 것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정의라는 것이 가망 없다는 절망에 이르는 것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되기 때문에 말이다. 이렇듯 나에게 현재의 민주주의 문제는 아직도 '과거청산'이라는 숙제에 매달려 있다. ■